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제108호**

제의연월일 : 2018년 10월 22일

제 의 자 : 조배식 의원 외 11명

1. 주 문

○ 결의문을 채택하여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 붙임: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참조

2. 제안이유

-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 시행령 개정 없이, 충남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충남 시·군에 대한 영향력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음.
- 현재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임.
- O 이에 우리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향후계획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도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전국광역자치단체장, 충청남도의장, 충청남도지사 등 결의문 발송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 사회복지 분야 등 수백건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본래의 취지이다.

그럼에도,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중 충남시·군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충청남도의회의 퇴보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 하는 일이며, 지방분권에 심대하게 역행하는 처사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충남시·군은 감사원, 중앙부처, 광역단체, 기초의회, 자체감사 등 사안마다 빈번한 감사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결국 고스란히 220만 충남도민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며,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유보된 상태에서 전국 광역의회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의회만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에 대한 권한만 높이겠다는 발상과 충남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충청남도의회는 2014년 충남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면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 국가 건설을향해 나아가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2014년도에 밝힌 내용과 같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에 동참해주길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시 · 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논산시의회는 위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행될 때까지 강력히 투 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0월 26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